

일본 대학 : 학위없는 교수 사회

유 혁 수 일본 요코하마 국립대 교수

1. 머리말

이번 호의 특별기획의 표제가 '국내박사 vs. 외국박사'로 되어있는 것은 국내 박사학위이든 외국 박사학위이든 간에 교수의 박사학위 취득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듯 싶다. 하지만 일본의 대학 사회에는 최근까지는 그러한 전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학문 분야 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국내 박사, 외국 박사를 논하기 이전에 많은 교수들이 학위를 갖고 있지 않다. 물론 일본의 대학원¹⁾이 지금까지 박사학위를 배출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숫자는 외국, 특히 미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편인데다 이공계 편중 현상을 보여 왔다²⁾. 일본의 '대학 설치 기준' 및 '대학원 설치 기준'에 의하면

교원으로 채용되기 위한 자격을 가진 자의 제 1순위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연구업적이 있는 자'이지만, 박사학위 배출이 부진한데다 박사학위를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는 교수 채용 관행으로 인해 실제로는 제 2순위인 '연구업적이 전자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여 온 것이다³⁾. 이 글의 표제가 '일본대학 : 학위없는 교수 사회'로 되어있는 것은 그때문인 것이다. 아울러 이번 호의 특별기획의 표제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교수들이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구자의 자체 배양 전통에 의해 국내 박사 편향 현상을 볼 수 있다⁴⁾.

이 글은 최근까지 박사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일본 대학 사회의 풍토를 교수 양성과 채용 제도 및 연구자

1) 대학원이란 일반적으로 학부의 위에 놓여져, '학술의 이론 및 응용을 교수, 연구하여 극치를 터득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학교교육법 65조)을 지칭하는 층칭으로, 개개(個個)의 대학원은 '연구과'라 불리고 있다.
 2) 1980년 일본의 학위 수여는 6,269명인데 반해, 미국은 32,958명, 독일은 12,283명이었다. 일본의 학위 수여 중 인문, 법경, 교육 등의 문과계는 187명으로 3%에도 못 미치는데 반해, 미국은 61%, 독일은 20%였다. 1994년에는 일본의 학위 수여 13,044명 중 문과계는 699명으로 5% 상승했지만, 반대로 미국은 43,185명 중 문과계가 50%로 하강했다. 文部省, 『平成 9年版 教育指標の國際比較』(1998년) pp.32~33.
 3) 文部省高等教育局企劃課監修, 『平成 7年改訂 大學設置審査要覽』(1995년). 참고로 말해두면 일본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이란 학교에 배치되는 직원 중 사무직원, 기술직원 등에 대해서 직접 교육에 종사하는 직원을 층칭하는데, 대학의 경우 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말한다.
 4) 참고로 요코하마 국립대학의 학위소지자 281명 중 외국박사 소지자는 16명이었다. 자료가 없어서 단언은 할 수 없지만, 타 대학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의 자체 배양 전통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2. 학위없는 교수 사회의 실상

우선 학위 없는 교수 사회인 일본 대학의 실상을 약간의 통계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전반적인 풍토가 그러하기 때문이라 생각되지만, 교수들의 학위 소지 여부에 대한 통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자료에서 실상을 추론할 수밖에 없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사실 이 글의 집필을 위해 사방으로 관련 자료를 수소문했지만, 전국적인 규모의 통계는 차지하더라도 대학별로도 자체 내에서 통계를 내고 있는 대학이 거의 없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요코하마 국립대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립대학, 그리고 동경대학조차도 교수들의 학위 소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았다. 다행히도 와세다대학이 전임교원의 박사학위 소지 여부의 통계를 내고 있었고⁵⁾, 요코하마 국립대학의 통계는 수년 전부터 간행하고 있는 교원총람(1998년판)에서 필자가 계산한 숫자이다.

와세다대학의 경우는 1998년 4월 1일 현재로 부속 연구소 및 전문학교 등을 포함한 전임교원 1,445명 중 450명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어, 31%의 소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324명 중 191명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이공학부가 59%의 소지율을 보이는 반면, 문학부는 222명 중 38명밖에 소지하고 있

지 않아 17%에 불과한데, 법학부, 상학부 등 문과계는 대체로 20%에서 30% 이하로 평균적으로 낮은 소지율이다. 요코하마 국립대학의 경우를 보면, 1998년 6월 1일 현재 전임교원 490명 중 281명이 박사학위를 소지해 57%라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전 교원의 반수 가까이를 차지하는 공학부가 78%라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경영학부의 경우는 49명 중 8명으로 18%에 불과하다.

두 대학의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문과계에 비해 이공계 교수들의 학위 소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이점은 동경대학과 와세다대학이 지금까지 배출해 온 박사학위 숫자로부터도 간접적이거나 확인할 수 있다. 동경대학은 신제대학원⁶⁾이 설치된 1953년부터 1999년 3월 31일 현재까지 과정박사⁷⁾ 14,646명, 논문박사⁸⁾ 14,267명을 배출했는데, 과정박사의 94%인 13,790명이, 논문박사의 95%이상인 13,586명이 이공계(의약학을 포함)이다⁹⁾. 와세다대학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1952년부터 1997년 사이에 1,275명의 과정박사, 1,375명의 논문박사를 배출했는데, 전자 중 88%인 1,120명, 후자 중 80%인 1,096명이 이공계이다. 두 번째로는 문학, 철학, 역사학, 교육학 등의 인문계 박사학위 못지 않게 경제학, 정치학, 법학 등의 사회과학 박사학위의 배출 및 소지가 극도로 저조하다는 점이다. 이 점도 간접적이긴 하지만 동경대학과 와세다대학의 박사학위 배출 숫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와세다대학은 기

5) 와세다대학 관계 자료는 와세다대학 廣報室 廣報課에서 자료를 제공받았다. 廣報課 후구하라 씨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이다.

6) 이 글에서 신제(新制)대학이란 1947년 4월 시행된 학교교육법에 의거해서 종래의 제국대학, 단과대학, 구제고등학교, 전문학교, 사범학교 등을 통합해서 발족한 새로운 대학을 지칭하는데 일부 사립과 공립이 1948년에, 국립은 1949년의 국립학교설치법의 제정에 따라 1년 늦게 발족했다. 구제대학이란, 상기의 戰前의 제대학을 통칭하는 것이다. 신제 대학원이란, 1949년 대학기준협회의 '대학원기준'과 그것을 답습한 1950년 대학설치 심의회의 '대학원설치기준'에 의거해 발족한 대학원을 지칭한다.

7) 과정박사란 소정의 年限에 재학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퇴학한 후, 수년(보통은 3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논문박사란 과정박사를 취득하지 못하고 도중에 퇴학한 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논문을 제출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9) 東京大學 廣報室, 『大學概要』(1999년) pp.24~25.

간 상기 중 경제학 7명, 상학 39명, 정치학 11명, 법학 26명, 문학 55명의 과정박사를, 경제학 6명, 상학 67명, 정치학 10명, 법학 42명, 문학 138명의 논문박사를 배출하고 있다. 자세한 숫자 제시는 생략하지만 동경대학의 박사학위 배출 상황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서 문부성의 대학원 중점화 정책에 호응하여 각 대학이 적극적으로 학위를 배출하기 시작함으로써, 학위 없는 교수사회의 양상은 젊은 교수들에 관한 한 상당히 바뀌어 가고 있다.

3. 학위 없는 교수 사회의 원인

일본의 대학이 왜 학위 없는 대학 사회가 되었는지에 대해, 필자의 전공이 법학인 관계도 있고 해서 주로 문과계의 상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원인으로서의 박사학위의 이미지

비재(非才)인 필자도 어렵게나마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지만, 가령 박사학위란 무엇이며, 왜 박사학위가 필요한가란 질문을 받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박사학위란 마치 장인 사회에서 도제(徒弟)로서 입문한 자가 다년에 걸쳐 기술을 연마해 한 사람의 장인으로 인정받고 나서도, 그 후 연마를 거듭해 마스터 피스를 세상에 내 보여 사장(師匠)으로 인정받듯이, 한 전공 분야에서 학문의 도달점에 달한 자에게 주어지는 명예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학문을 연마해, 한 사람의 연구자로서 인정받는 출발점에 지나지 않은 것인지는 나라와, 사회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일본에서는 최근까지 박사학위를 학문의 도달점으로 생각해 왔는 바, 그것이 박사학위 배출을 저조하게 한 원인의 하나였지 않았나 생각된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이미 인정받은 저서를 제출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논문박사의 숫자가 과정박사의 그것에 못지 않게 많은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2) 문제의 구조적 원인

① 구제(舊制)대학 시기

위에서 박사학위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학위 없는 대학사회로서의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측면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즉, 일본에서는 학위를 필요로 하는 풍토가 정착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학위가 시장 가치를 갖는 사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학위를 필요로 하는 사회의 경우는, (i)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 및 대학원의 인식, (ii)일반교육기관으로서의 학부와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원의 역할 분담, (iii)학위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정비, (iv)학위의 시장가치의 존재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을 고등교육의 대중화 흐름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철저하게 갖춘 나라가 미국인 것을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미국은 19세기 후반 연구 중시의 홈블트적인 독일 대학 모델을, 일정 수업 연한동안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수료하는 자에게 학위를 수료하는 graduated school=과정제대학원으로서 도입해 제도화하고, 현재 고등교육의 세계적 모델로서 군림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에 반해, 일본의 대학 및 대학원은, 최근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명확히 부여하려는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연구 및 연구자 양성 기관으로서 존재해 왔다. 일본의 고등교육 체계는 1903년 전문학교령과 1919년 대학령 및 고등학교령의 제정으로 기본 골격이 갖추어졌는데, 전문학교 이하의 교육 기관이 주로 실용적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대학은 구제(舊制)고등학교와 대학예과에서 학력면·인격면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자기형성을 이룬 학생을 받아들여, 교수들은 오로지 전문 지식의 교수 및 연구에 전념했다. 구제대학의 커리큘럼 및 교원 조직의 근간은 '교육연구상 필요한 전공분야를 정해, 그 분야의 교육연구에 필요한 교원을 두는 제도'인 '강좌제'인데, 단과대학 안에 학과 및 전공 분야별로 복

수의 강좌가 설치되어 교수, 조교수 및 조수가 교육연구의 하나의 단위를 이루었다¹⁰⁾.

그리고 교수 양성은 강좌제의 틀 안에서 연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대학 졸업 후 조수로 채용되거나 특별연구생으로 지명되어 '도제(徒弟)'처럼 교수 밑에서 연마를 거듭해 연구 논문을 완성시켜 동업집단에 데뷔하는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도제제(徒弟制)란 사장(師匠)이 장인으로서의 양식(良識)과 직감으로 제자의 자질(및 가능성)을 파악하고, 도제는 어깨너머로 사장(師匠)의 재능을 배워나가 그 자질이 증명되면 한 사람의 장인이 탄생하는 제도이다. 사장(師匠)은 보통은 복수의 도제를 받아들여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자를 후계자로 지명한다. 도제에 해당하는 조수는 조교수(匠人)를 거쳐 마침내는 교수(師匠)가 되는 것이다. 학부와 대학원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고, 교수 양성이 일종의 도제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소정의 교과과정 이수 후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제대학원의 기반이 형성될 수 없었음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미 명치(明治) 중엽인 1886년 '제국대학령'으로 제국대학에는 '학술기에(學術技藝)의 온오(繡奧)를 교구(巧究)' 할 목적으로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대학원은 연구 및 연구자 양성 기관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조차 발휘하지 못하는 주변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구제대학 시절에 교수양성이 도제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데는 과의 경쟁 속에서 인재를 확보해야 하는 또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 국가 위주의 경제발전을 꾀해야 하는 후발국가에서는 강력한 권한과 신분보장이 주어지

는 관료집단에 우수한 인재가 모이기 마련이다. 대학원이 본래의 모습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따라서 학위의 시장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생활 및 미래의 보장이 불가결하다. 전도유명한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시장 가치 없는 대학원생 신분이 유인이 될 수 없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조수란 직업적 신분을 보장하고 나중에는 교수가 될 수 있음을 상당한 개연성 아래 약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우수한 졸업생에게는 법관과 관료라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있는 법과대학의 경우가 가장 심각했다. 관료 양성소라는 이명(異名)이 붙은 동경대학 법학부가 현재까지도 학사 조수로부터 대부분의 교수를 채용하는 '조수/대학원 이원제'¹¹⁾를 버리지 못하는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이다. 도제제에 의해 교수가 양성되고, 사장의 추천에 의해 타동업자가 도제를 인수받는 '신용거래'에 의한 교수 채용의 관행이 전자와 맞물려, 전전(戰前)의 제도를 형성했던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 양성을 일부 대학에 독점시키는 문부성의 정책하에서, 소수의 제국대학 및 일부 사립대학의 우수한 학사출신 조수들이 비공개 '신용거래'에 의해 교수로 채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대학원 진학, 박사학위 취득, 공개모집에 의한 교수채용 방식은 들어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대학원은 조수제란 고속도로 밑을 달리는 일반도로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② 신제(新制)대학 시기

폐전후 미군정 당국의 압력하에 대학과 대학원의 역할 분담이 제도화되어, 새로이 발족된 신제대학이 일반교육

10) 대학설치기준 7조 3항. '교육' 상 필요한 경우 '學科目'을 둘 수 있도록 되어있는 7조 2항과 대비해서 보면 '강좌제'는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 '조수/대학원 이원제'란 법령상 그러한 용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행에 의거해서 필자가 붙인 조어(造語)이다. 동경대학 법학부에는 '법학정치학연구과'란 대학원이 있지만, 학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생은 곧바로 조수로 임용되어 보통 3년 안에 '출세논문'인 조수논문을 집필해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쓴 자가 본교에 남는 영예를 획득하고, 차집자 이하(以下)는 타 대학으로 나가는 것이다.

을 담당하고,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나뉘어진 과정제 대학원이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제도가 도입됨으로서 법 제상으로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원의 위치가 명확해졌다. 하지만 대학원을 교육기관화하는 미국식의 과정제 대학원은 연구 중심의 대학원 이미지에 집착하는 교수사회의 저항으로 상당기간 정착되지 못했다. 특히 1955년 '대학원 설치 기준'이 개정되어,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석사과정에 연구자 양성뿐 아니라 '고도의 전문 직업인 양성' 기능이 부여되었지만, 실제로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연구자/교수 양성 중심으로 운영하는 실태는 변하지 않고, 소수의 교수 지망생이 대학원에 진학하여 강좌 및 연구실(이공계) 단위로 교수 밑에서 세미나식 수업에 의한 일정 단위를 취득한 후 그 교수의 추천에 의한 '신용거래'에 의해 대학 및 연구소에 취직하는 패턴에는 변화가 없었다. 더구나 우수한 대학원생은 학부 졸업 후 또는 석사과정 수료 후 바로 조수로 발탁되어 모교에 남을 수 있는 특권을 향유하는 구제대학 시절의 관행에도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조직은 처음 창설될 때 각인된 특성을 일종의 DNA로서 그 후에도 간직하게 된다고 한 사회학자가 말했다지만¹²⁾, 전후의 일본 대학원은 명치(明治)시대 이후의 연구기관이라는 성격하에서의 교수 양성 및 채용 패턴이라는 DNA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대학원이 과정제대학원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박사학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배출할 기반이 잡혀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의 대학분쟁이 종식되고 난 후인 1974년 '대학원 설치 기준'이 새로 제정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신기준은, 첫째로 대학원과정의 목적 및 성격을 명확히 했다. 석사과정의 목적에 고도의 전문 직업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박사과정은 연구자 양

성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박사학위 취득을 연구자로서의 도달점이 아니고 출발점임을 명확히 함으로서 종래의 박사학위 배출의 이념적 장애를 제거했다. 연구내용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 석양의 Ph.D에 해당하는 포괄적 학위로서 '학술박사'가 학위 종류에 추가된 것도 이 때이다. 특히 석사과정에 고도의 전문직업교육이란 목적이 명시된 것은 석사과정이 실천적인 전문직 양성을 담당하는 미국식의 Professional School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연한 및 단위 규정이 수정, 정비되었다. 석사과정은 과정제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반면, 박사과정은 원칙적으로 개별적 연구지도를 중심으로 과정제적 제약을 완화했다. 마지막으로 종래의 학부/대학원일체형 조직의 탈피를 위하여 학부없는 대학원대학(독립연구과라 불린다) 설립이 가능하게 되는 등 대학원의 독자성 강화가 꾀해졌다.

새로운 '대학원 설치 기준' 아래에서 이공계 대학원의 석사과정은 Professional School로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¹³⁾, 타분야, 특히 문과계는 석사과정을 포함해서 연구자/교수 양성의 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여전히 불식하지 못했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단위 규정의 정비에 따라 코스워크가 강화되었지만, 박사학위가 학문의 도달점이라는 종래의 이미지는 특히 문과계에서는 쉽게 바뀌어지지 않고, 일부 유학생을 제외하고는 일정 단위 취득후 교수 소개에 의해 취직을 서두르는 상황에도 변화는 없었다. 그리고 동경대학 법학부를 제외하고 학사 조수제도는 많은 대학에서 지취를 감추었지만, 우수한 대학원생은 석사 수료와 동시에 또는 박사과정 재학 중 조수로 임용되어 장래를 약속 받는 변형된 '조수/대학원 이원제'가 여전히 잔존했다.

12) 川嶋太津夫「大衆化する大大学院」, 黒崎 勲外編「岩波講座 10 變貌する高等教育」(岩波書店, 1998년), p.202.

13) 새로운 '대학원 설치 기준' 제정 후 공학계의 석사과정 정원 총족률은 급속도로 증가되어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학부 졸업생이 석사과정에 진학해, 공학계들의 교육은 실질적인 6년제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연구자 자체 배양 전통과 외국 박사

이러한 교수 양성 및 채용제도하에서는 국내 박사의 배출도 저조했지만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인센티브를 저해했으리라는 것은 용이하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공개 신용거래에 의해 취직이 가능한 사회에서 외국에 유학해 학위를 받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웬만큼 국내 교수와의 연계가 확실하지 않고는 아무개가 어떤 자인지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측면은 국내적으로 정착된 학문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의 학계의 풍토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연구자의 자체 배양(즉 자체 재생산)의 방침과 시스템을 제도화시킨 점이다. 메이지(明治) 초기 동경대학의 정규수업이 외국인 '용병' 교수에 의해 영어로 행해진 데 대해 게이오대학 창립자 후쿠자와가 통렬한 비판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만, 언제부터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서양 문물의 계수(繼受) 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부터는 국내에서 일정한 수업을 쌓은 다음 일정 기간 유학을 하고 마무리는 국내에서 짓는 것이 관행이 되어갔던 것이다.

물론 외국 박사의 극단적인 부재 상황을 상기와 같은 연구자의 자체 배양 전통에만 기인시키는 것의 한계를 부인할 생각은 없다. 다른 외제적인 요인도 한 몫 거들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패전후의 외화부족 및 외화 사용 규제하에서 외국에 장기간 유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실제 어려운 그 시기에 외국의 유명 대학에 유학을 하고 학계에서 활약한 몇몇 사례는 존재한다. 하지만 적어도 우수 대학의 핵심적 후계 양성이 국내적인 순수 배양 형태로 이루어져 왔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말년에 동경대학 법학부 교수를 지낸 한 교수의 경우 '60년대 미국 대학에

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 왔으나 동경대학에서 다시 6년이나 걸려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야기는 하나의 대표적 실례다.

일본 대학이 국내적 순수 배양의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식의 학문적 토양을 발전시켜 왔다는 배경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마르크스주의 중심의 경제학, 정치학의 법학에의 종속, 경영학이 아닌 상학의 존재 등이 그것을 말한다. 이제 세계가 학문을 포함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 국내적 순수 배양의 전통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쇠퇴와 근대 경제학의 중시 경향, 정치(사상) 및 정치학설사 위주의 유럽식 정치학 중심에서 미국식 정치학에의 경사, 독일 법학에서 영미법에의 중심 이동 등에 의해 외국 박사가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 질 것이다. 그에 따라 종래의 자체 재생산 시스템의 존속 여부가 본격적으로 테스트 받을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5. 1990년대의 대학원 개혁과 전망

1984년 나카소네 내각하의 '임시교육심의회'의 설치에 거슬러 올라가는 일본의 대학 및 대학원 개혁 바람은 1990년대 대학원의 양적 확대와 경쟁원리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학심의회'의 일련의 답신(答申)에 근거하



고 있다¹⁴⁾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가 대학원 기능의 다양화인데, 사회인 교육 및 전문직업인 교육 기능이 증시되어 그에 따라 박사과정의 목적에도 '고도의 전문적 업무종사자의 양성'이 추가되었다. 둘째로 대학원 진학 및 학위 취득의 용이화로서 대학원의 수험 자격 및 수업 연한이 탄력화되고, 특히 박사학위에 관해서는 학위 수여의 원활화가 강조되었다. 또한 커리큘럼과 교육 방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에 따라 고도 전문직업인 양성 과정의 경우에는 수업 연한 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논문지도, 발표, 심사과정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연구자 양성 과정의 경우에도 종래와는 달리 매년 상당수의 학위가 수여되도록 되었다. 세번째로 교수 인사 개선의 촉구인데, 특히 종래의 교수 채용이 강좌 및 교실 단위로 좁은 시야에서 연구업적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데 대해, 연구면뿐 아니라 교육면의 자질도 함께 평가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교수 채용 시 공개모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교원 임기제 도입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 분위기 속에서 현재까지 대학원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점점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거품이 꺼지면서 취직이 어려워진 학부 졸업생들이 타인과 자기를 차별화하려는 경향, 기업의 종신고용제 붕괴에 의한 개인의 케리어 향상 노력, 고령화 및 소자화(小子化)사회에서 고령자 및 여성의 대학원 지향 경향 등등, 새로운 요인들이 대학원의 존재와 기능을 재평가하게 하고(박사)학위의 사회적, 시장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토양 위에 패전적 후 이식에 실패했던 미국식 대학원교육의 재도입이 시행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일본의 사회도 학위를 필요로 하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다. 새로운 토양과 제반조건하에서 종래의 교수 양성 및 채용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갈지는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종래의 도제제에 의한 교수양성과 '신용거래'에 의한 교수 채용도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장점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도제제 및 '신용거래'란 교수의 양식과 자기보존 욕에 의거하고 있는 제도이다. 사장이 후계자를 잘못 정하면 그 기문은 멸망을 면치 못할 뿐 아니라, 잘못된 제자를 함부로 소개하면 신용의 실추를 가져와 기문의 번영은 기대할 수 없다. 현재 공개모집이 서서히 늘어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주요 대학에서 신중론이 강한 것은 공개모집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도제제의 유효성이 아직 결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둘째로 강좌제가 학제적(interdisciplinary) 및 복합적(multidisciplinary)인 연구보다 좁고 깊은 연구 풍토를 조장한 것은 틀림없지만, 연구 중시의 풍토 속에서 특히 젊은 학자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질 높은 연구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데 공헌한 것도 사실이다. 대학 사회에는 최근의 대학원 개혁 바람이 경쟁이란 이름하

14) '대학심의회'의 答申의 결정판이자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최근의 答申인「21世紀の大學像と今後の改革方策について-競争的環境の中で個性が輝く大學」(1999年10月26日)이다.

에 양적 평가에만 흐를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아직도 강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새로운 풍토 속에서 종래의 '학위없는 대학사회'가 크게 영향받을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한원**

〈참고문헌〉

中山 茂, 『帝國大學の誕生—國際比較の中での東大—』(中公新書, 1978年)
大崎 仁, 『1945~1999 大學改革』(有斐閣選書, 1999年).
黒崎 勲外編輯 『岩波講座 10 變貌する高等教育』(岩波書店, 1998年)
所收 諸論文.
粟村幸彦/下村哲夫, 『教育法規大辭典』(エムティ出版, 1994年)
文部省, 『學制百二十年史』(ぎょうせい, 1993年)

유척수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동경대 대학원에서 법학 修士(碩士)·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경대학, 차배대학, 동경도립대학, 통상산업성 통상산업연구소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요코하마 국립대학 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ガット 19條と國際通商法の機能」, 「ガットの紛争處理に關する調査調査報告書」, 「資料で讀み解く國際法」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국제통상법에 있어서의 '공정성' 개념의 의미와 문제점」, 「セーフガード協定」의 다수가 있다.